

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, 신고 전에 확인받으세요

- 기획재정부, 2022. 1
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연구인력개발비(R&D)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2020년부터 「사전심사 제도」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.
 - * 사전심사 신청건수: ('20년) 1,547건 → ('21년) 2,332건
-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, 우편,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
 -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①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, ②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.
-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* 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,
 - *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
 -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월말에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」을 발간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- 기업이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,
 -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.

1

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」 제도란?



□ (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)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·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*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.

*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,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,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

□ (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)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써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○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큰 반면, 연구·인력개발 활동 여부,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합니다.

○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.

⇒ 이에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연구·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〈 연도별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〉

(개, 억 원)

구분	2018년		2019년		2020년	
	기업수	공제액	기업수	공제액	기업수	공제액
계	30,353	22,998	34,122	22,305	37,525	26,430
일반	1,519	10,813	1,453	9,658	1,526	13,413
중소	28,834	12,185	32,669	12,647	35,999	13,017

* 출처 : 국세통계연보

2

납세자는 사전심사를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□ (신청인)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(개인사업자)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□ (신청기한) 법인세(소득세)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신고서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부분은 경정청구, 수정신고,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□ (신청방법) 홈택스(www.hometax.go.kr)*, 우편, 방문접수(세무서 민원봉사실, 지방청 법인세과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홈택스 : 신청/제출 > 일반세무서류 신청 > 민원명 찾기 “연구” > 조회하기 > 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

- (신청대상 비용) 연구·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 가능하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-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사항,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,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·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항 등의 경우 심사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- (신청서류) 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, 연구개발 보고서, 연구개발비 명세서,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·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3 국세청은 어떻게 심사하나요?

- (심사 내용)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.
- (기술검토)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연구개발*에 해당하는지 여부
 - *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
 - (비용검토) 신청인이 연구·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정한 공제대상 금액인지 여부
- (심사 관할) 연구·인력개발비의 종류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심사 담당 관할을 구분하여 심사를 합니다.
- 기술검토는 신성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는 국세청이 각각 담당하고, 비용검토는 국세청이 모두 담당합니다.

〈 연구·인력개발비 비교 〉

구 분	정 의	세정지원	검토 기관	
			기술검토	비용검토
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	조특령[별표7]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	· 당기에 지출한 신성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40% 세액공제	한국산업기술진흥원	국세청
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*	조특령[별표7의2]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	· 당기에 지출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50% 세액공제	한국산업기술진흥원	국세청



일반 연구·인력 개발비	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·인력개발비	· ① 당기 지출 연구·인력개발비의 최 대 25% · ② 전년 대비 증가한 연구·인력개발 비의 최대 50% → ①, ②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	국세청	국세청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	-----

*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관련 내용은 현재 입법예고 중

-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담팀에서,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은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심사를 담당합니다.

□ (서면심사 원칙)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.

-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,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
□ (재심사 청구)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4

2022년에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요?

□ (신청서류 정비) 신청서 작성과 증빙자료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사전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하였습니다.

- 그 동안 사전심사를 진행하면서 업무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고, 범위도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「공제대상 연구·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」는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한정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.

□ (누리집 보완) 2020.1.1.부터 연구노트 등 작성·보관이 의무화*됨에 따라 ①연구노트 작성사례와 그 동안 수행한 사전심사를 토대로 ②세액공제 인정·불인정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.

*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 5년간 보관해야 함(조특령 §9⑩)

□ (기술심사 인력 증원)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심사를 위해 산업분야별 기술심사 전문인력을 증원(4명)*합니다.

* 디자인·콘텐츠, 에너지 및 유체공학, 정보통신, 생명공학 분야 채용절차 진행 중

5 사전심사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□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(소득세)를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(단,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, 사실관계의 변경·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).

①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* 및 감면사후관리**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*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

**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·감면 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제도

②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.

6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?

□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가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연구·인력개발 투자를 통해 건실한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○ 기업이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」을 제작·배포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.
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단계부터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.

※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(지원4팀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(☎ 044-204-3923~9)